

‘4·3’의 公的 인식 및 서술의 변천

朴贊殖*

1. 머리말
2. 4·3 당시 인식
3. 4·3 이후 인식과 서술
4. 맺음말

1. 머리말

‘4·3’은 1948년 4월 3일 새벽 두 시 한라산의 무장대가 제주도내 경찰지서 및 우익단체원을 겨냥해 무장 습격한 날을 기억하여 붙인 사건 명칭이다. 또한 ‘4·3’은 4월 3일을 전후로 하여 장구한 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난 총체적 사건을 가리키는 역사적 용어이다. 때문에 ‘4·3’의 뒤에 따라와야 할 사건의 성격을 나타내는 후속 명칭은 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사태’·‘폭동’·‘반란’·‘소요’·‘봉기’·‘항쟁’·‘양민학살’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는 미군정기로부터 신생국가 수립 과정에서 보이는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¹⁾

게다가 4월 3일 당일 무장대의 거사 이전에 1947년 3·1사건 이후의 과정이 내재해 있고, 4월 3일 이후로도 1954년 한라산의 禁足令이 해제될 때까지 오랜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이 글에서 사건 명칭을 ‘4·3’이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이 다양한 후속 명칭이 현재까지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공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전제해 둔다. 이후로는 따옴표를 쓰지 않고 4·3으로 통칭하겠다.

기간 한라산의 무장대는 존속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4·3이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장기지속성은 4·3의 성격을 매우 복합·다층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00년 대한민국에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4·3은 ‘4·3사건’으로 통칭되고 있다.²⁾ 물론 각 개인·계층·집단의 당파성과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역사적 성격 규명이 더욱 진전된다면 사회문화적 합의와 공적 인식 과정을 거쳐 ‘사건’이 다른 명칭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1948년 4월 3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공공기관과 언론매체, 시민사회 등 공적 영역에서 4·3을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하여 왔는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³⁾ 지금까지 사적 기억, 사회적 기억에 대해서는 김종민·권귀숙의 글이, 인식과 담론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박찬식·양정심·김영범·고성만의 글이 작성된 바 있다.⁴⁾ 그러나 아직까지 4월 3일 당일로부터 쓰인 사건 명칭에 주목하여 공적 인식·서술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4·3의 공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는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및 정당이 직접 작성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데 주로 이용한 자료는 신문 기사가 될 것이다.⁵⁾ 그리고 역사적

2) 4·3의 뒤에 붙는 ‘사건’은 일반적 의미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쓰인 역사적 용어이다. 4·3을 ‘사건’이라고 할 때에는 4·3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타협과 절충, 유보, 일종의 중립성 유지의 의미가 내포해 있다. 또한 민간인 대량 학살과 피해 실태를 정부나 시민사회가 그대로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대신 쓰인 용어이기도 하다.

3) 이 글에서 ‘公的’이라 함은 국가·정부와 연관된 공공기관의 범위(official)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사회까지 아우른 公共的(public)이란 의미로 넓혀서 쓰고 있음을 밝혀둔다.

4) 김종민, 「4·3 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권귀숙, 『기억의 정치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문학과학지성사, 2006; 박찬식, 「4·3 연구의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2, 실천문화사, 1999;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민주주의와 인권》 3집 2호, 2003; 고성만,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4·3과 역사》 5, 2005.

인식과 기억을 국가가 주도하여 합의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역사 교육이고, 이때 교과서가 기억을 집산화하는 기본 기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역사교과서 속에 4·3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피는 것 또한 이 글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4·3 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4·3의 正名化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앞으로 전개될 용어 획득을 둘러싼 여론 투쟁에서 올바른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글을 통해 미래 4·3의 기념과 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교육 자료의 올바른 편찬 방향을 전망해볼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2. 4·3 당시 인식

1) ‘폭동’과 ‘항쟁’, 그리고 ‘사건’

1948년 4월 3일 재산 무장대의 제주도 일원에 대한 습격이 있는 직후 이에 대한 첫 공식적 반응은 조병옥 경무부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4월 5일 5·10총선거 촉진 대강연회 석상에서 “제주도서 총선거 반대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였다.⁶⁾ 제주 현지에서 4월 6일 제주경찰청이 “제주도 각지에는 폭도들의 경찰지서 습격사건”이 일어났다고 공식 발표하였다.⁷⁾ 4월 5일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설치된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정호 경무부 공안국장은 4월 8일자로 “제주도내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도에 대하여 전 경찰력을 집중, 소탕전을

5) 북한 신문과 일본의 제일조선인 발행 신문을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신문을 중심으로 한 4·3 인식을 본격적으로 살핀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박찬식, 『북한의 제주4·3사건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0, 2004; 무라카미 나오코, 『프란게 문고 내의 제일조선인 발행 신문에 나타난 제주 4·3 인식』, 《4·3과 역사》 5, 2005.

6) 《동아일보》; 《독립신보》; 《조선일보》; 《한성일보》 1948년 4월 6일자.

7) 《독립신보》; 《조선중앙일보》; 《현대일보》; 《자유신문》 1948년 4월 7일자.

전개하려 한다”고 포고하였다.⁸⁾

이와 같이 4월 3일의 무장대 습격을 미군정 경찰은 즉각 ‘폭동’으로, 무장대를 ‘폭도’로 규정하였다. 당시 언론은 이러한 경무부의 발표를 수용하여 ‘제주도 폭동사건 심대’,⁹⁾ ‘제주도 폭동에 위무공작대 파견’,¹⁰⁾ ‘전도에 걸쳐 봉기된 제주도의 공산계열 폭동’¹¹⁾ 등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대동청년단 총본부가 “과반 선거 반대를 기치로 하여 폭동을 야기한 제주도 폭동사건의 폭도”라고 발표한 내용대로 《대동신문》은 ‘제주도 반선 폭동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¹²⁾

한편 대부분의 우익 성향의 신문들이 폭동으로 보도한 것과는 달리, 제주 지역의 신문인 《제주신보》와 중도지 또는 좌익 성향의 신문들은 대부분 ‘소요 사건’으로 온건하게 표현하였다.¹³⁾ 특히 중도좌익지인 《독립신보》와 《조선중앙일보》는 민전의 “제주도 사건은 그 동기가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일어난 애국적인 것이다. 제주도 인민에 대한 폭압을 중지하라”는 성명 내용을 게재하면서 ‘제주도의 인민소요’·‘제주도 사건’ 등으로 보도하였다.¹⁴⁾

4월 중순 이후 무장대 활동과 미군정의 대응이 첨예화되는 과정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매체의 인식도 대립되어 갔다. 우익계의 신문들은 미군정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좇았다. 경무부장 조병옥은 4월 14일 「도민에 고함」이란 선무문을 통해 ‘무모한 폭동’이라고 못 박았고,¹⁵⁾ 제주경비사령부 또한 ‘폭동 사건’이라고 명확히 하였다.¹⁶⁾ 이에 맞추어 《조선일보》는 “지난 3일 이래 제주도에서

8) 《제주신보》 1948년 4월 10일자.

9) 《동광신문》 1948년 4월 8일자

10) 《조선일보》 1948년 4월 13일자.

11) 《동아일보》 1948년 4월 17일자.

12) 《대동신문》 1948년 4월 13일자.

13) 《제주신보》 1948년 4월 8일자;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14일자; 《서울신문》 1948년 4월 17일자; 《우리신문》 1948년 4월 17일자. 해방 직후 각 신문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윤덕영의 다음 글을 참조하여 분류하였음을 밝혀 둔다.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16, 1995.

14) 《독립신보》 1948년 4월 16일자;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17일자. 《독립신보》는 여운형 계열의 입장을 반영했던 신문으로서, 주필은 제주 출신 고경흠이었다. 《독립신보》는 1947년 3·1사건의 실상을 상세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15)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자.

16) 《현대일보》 1948년 4월 22일자.

발생된 폭동”·“제주도에서 발생한 선거반대 폭동”으로, 17) 《동아일보》는 “한라산의 동굴을 본거로 하여 신출귀몰하는 반동분자들”¹⁸⁾·“제주도는 미증유의 폭동”¹⁹⁾ 등으로 화답했다.

반면, 《독립신보》·《우리신문》·《조선중앙일보》 등 좌익계 신문들은 ‘소요사건’·‘무장봉기’·‘제주도의 항쟁’·‘제주도 인민봉기’ 등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독립신보》는 “제주도민들이 외군 철퇴, 단선단정 반대 등을 부르짖은 끝에 민경 간의 무력충돌로 발전한 제주도 소요사건”이라고 나름대로 정리하였다.²⁰⁾ 《우리신문》 또한 ‘제주도의 작금 사태’·‘제주도 인민봉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하한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창의와 비판의 자유가 권력이나 혹은 무력을 억압당할 때 인민들이 이에 항거 투쟁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게재하였다.²¹⁾

이들 신문은 당시 좌익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소개하는 형식을 빌려 자사의 논조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우리신문》은 반일운동지구위원회가 “등록 강제에 대한 제주도 인민들의 반항과 시위에 대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4월 3일 이래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인민항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²²⁾ 《독립신보》는 전농, 문학가동맹, 유련, 협조시위, 과학기술연맹 등이 “조선의 자주통일 민주독립을 전취하는 구국투쟁”이라는 담화문 내용을 게재하였다.²³⁾ 《조선중앙일보》는 문학가동맹의 “단선등록을 강요하려는 폭압에 반대하여 지난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동도 전 애국국민의 총궐기 투쟁”이라는 성명서 내용을 보도했다.²⁴⁾ 특히 근민당은 “단선을 반대하고 조국의 민주통일을 기하는 것은 조선민족의 지상명령이며 이를 위하여 일어난 제주도민들의 4월 3일 투쟁은 타당한 것이다”라고 하여,²⁵⁾ ‘4월 3일’이란 날짜가 사건의

17) 《조선일보》 1948년 4월 17일자.

18) 《동아일보》 1948년 4월 21일자.

19) 《동아일보》 1948년 4월 29일자.

20) 《독립신보》 1948년 4월 25일자.

21) 《우리신문》 1948년 4월 30일자.

22) 《우리신문》 1948년 4월 21일자.

23) 《독립신보》 1948년 4월 29일자.

24)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29일자.

공식 명칭으로 처음 쓰인 사례로 확인된다.

이러한 좌익계의 언론 공세에 대해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은 “폭동사건을 인민항쟁이라 찬미하면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²⁶⁾ 《동아일보》는 “무지몽매한 도민을 폭력으로 선동하여 경찰을 습격케 하고 살인 방화 약탈 등 갖은 잔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반민족적 도배들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좌익계의 논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찰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김정호 경찰 방위사령 공안국장이 “2,000명으로 추정되는 반도들은 대개 백정들로 좌익 계열에서는 일부러 잔악한 살인을 감행하기 위하여 남조선 각지로부터 백정을 모집하였다”는 말을 그대로 게재하였다.²⁷⁾

한편 재산 무장대와 경찰이 심각하게 대치하던 상황에서 제주 주둔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은 무장대 지도자 김달삼과의 협상을 추진하였다.²⁸⁾ 김익렬은 4·3을 “도내 각지에서 야기된 前古 미증유의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불개입의 중립적 위치에서 보았고, 군은 “정부재산 및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⁹⁾ 김익렬은 나아가 4월 22일 재산 무장대에 살포한 전단에 “우리는 과거 半朔 동안에 걸친 형제 제위의 투쟁을 보았다. 제위의 불타는 조국애와 완전 자주통일 독립에의 불퇴전의 의욕을 잘 알았다. 동족상잔은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여,³⁰⁾ 무장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4·3을 다시금 동족상잔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입장에 있었다. 김익렬의 인식은 당시 국방경비대와 경찰이 4·3을 바라보는 인식이 상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로 인해 김익렬은 미군정을 대리한 조병옥과 충돌하여 연대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김익렬의 해임은 5월 이후로는 4·3 인식의 교차 지점에서 중립지대가 없어지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신중하게 주시했는지 몰라도, 4월 말부터 5월 초까

25) 《우리신문》 1948년 4월 30일자.

26) 《우리신문》 1948년 4월 29일자.

27) 《동아일보》 1948년 4월 30일자.

2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190-198쪽.

29)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자.

30) 《독립신보》 1948년 4월 30일자.

지 미군정, 군, 경찰, 좌익단체 모두 강경한 발언이 일시 정지되었다. 각 신문에서는 ‘폭동’이란 용어보다 ‘소요사건’·‘제주도 사태’·‘제주도 사건’ 등의 중립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³¹⁾

그러나 5월 5일 제주읍 미군정청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수뇌회의 결과, 미군정은 김익렬의 선무책을 무시하고 강경진압 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다시 보수언론은 4·3을 폭동으로 재규정하였다. 《동아일보》는 제주도 현지에 특파원을 파견하면서까지 집중 취재를 하여, “제주도 폭동은 지난 4월 3일 상오 2시를 기하여 도내 14개소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총격 투탄 방화로 경찰관과 그 가족을 참살한 데서 발단된 남로당계의 폭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³²⁾ 반면 남로당 기관지인 『노력인민』은 보수 언론과는 정반대 입장에서 4·3을 “제주도의 위대한 구국투쟁”³³⁾ 또는 “5·10 망국 단선 분쇄투쟁”³⁴⁾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5·10 선거를 전후하여 좌·우익 양 진영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빚은 상반된 결과였다고 보인다.

1948년 6~7월에 들어와 제주도의 긴박했던 상황은 서서히 이완되어 갔다. 6월 18일 강경한 토벌 입장을 고수하던 박진경 제11연대장이 피살되고, 6월 17일에는 제주 출신의 온건한 입장을 유지한 김봉호가 제주경찰감찰청장에 임명되었다. 6월 초에는 본격적인 4·3 관련자에 대한 공식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제주를 드나들었고, 이인 검찰청장도 제주를 다녀갔다. 제주 상황을 취재하려는 신문사 및 통신사의 언론인들의 출입도 잦아졌

31) ‘제주도의 소요사건’(《자유신문》 1948년 4월 30일자); ‘협약한 제주도사태’(《한성일보》 1948년 4월 30일자); ‘제주도 소요사건’(《대동신문》 1948년 5월 3일자); ‘4월 3일 도내 소요사건’(《서울신문》 1948년 5월 3일자); ‘4월 3일 소요사건’(《조선일보》 1948년 5월 3일자); ‘제주 소요’(《서울신문》 1948년 5월 4일자); ‘제주도 사건, 제주도 소요’(《우리신문》 1948년 5월 5일자); ‘제주도 소요사건’(《경향신문》 1948년 5월 6일자); ‘제주도 사건’(《우리신문》 1948년 5월 6일자); ‘제주도 소요사건’(《조선일보》 1948년 5월 6일자); ‘제주도의 소요사건’(《대동신문》 1948년 5월 7일자).

32) 《동아일보》 1948년 5월 7·9·18·20일자

33) 《노력인민》 1948년 5월 25일자. 이는 남로당에서 처음으로 제주 4·3에 대해 보도한 기사이다.

34) 《노력인민》 1948년 6월 3일자.

다. 8월 15일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앞둔 일시적인 소강상태였다. 이 기간에 신문과 잡지 지면에는 4·3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려는 기사들이 부쩍 늘어났다.

대표적인 것은 조선통신 조덕송이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한 제주도 현지 취재 기사였다.³⁵⁾ 이 기사는 《신천지》 1948년 7월호에 정리되어 게재되었다. 조덕송은 4·3을 “4월 3일 미명에 돌발한 제주도 동란”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관의 발표는 “모든 원인을 대부분 인위적인 것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즉 공산계 열의 남로당 분자가 주동이 되어 선량한 도민을 선도하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警民을 이간시키고 적구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흉악무도한 반란이 이번 동란의 근본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제주도민을 “직접 동란의 희생이 되어 있다”고 하였고,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인사의 객관적인 인식을 자신의 기사에 주로 인용하고 있다. 그에게 4·3은 ‘폭동’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서의 ‘사건’이었다. 사건의 중심에는 제주도민의 비극적인 희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천지》 1948년 8월호에 실린 홍한표의 글 ‘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에서도 “아직도 동족상잔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제주도”·“금반의 사건” 등이라고 제주도민을 동정하는 입장이 드러나 있다. 그는 김익렬 중령의 수기³⁶⁾ 첫 머리를 인용하면서 “4월 3일 오전 3시를 기하여 전도에 걸쳐 일제히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이라고 하여, ‘발생’·‘사건’ 등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 제주 현지를 다녀간 기자들은 미군정 당국, 경찰의 입장과는 매우 다르게 4·3을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신문》과 《조선중앙일보》는 한독당·민독당 등 20여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사건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집중 보도하였고, 《조선중앙일보》는 제주 현지에 특파원을 보내 제주도발 기사를 게재하였다.³⁷⁾ 기자들은 최경록 제11연대장과 김봉호 제주경찰청장과 만나 ‘산사람들’의 요구 사항과 활동, ‘4·3사건’ 이래 지금까지 피해 상황 등을 취재하여 ‘동란의 제주도 현지 보고’라는 제목하에 기사화하였다.³⁸⁾ 당시 언론계의

35)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4~13일자.

36) 《국제신문》 1948년 8월 6~8일자.

37) 《서울신문》 1948년 7월 24일자;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24·29·30일자.

4·3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이제 언론을 통해 ‘4·3사건’이란 용어가 일반적인 사건명으로 인식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병옥 경무부장은 6월 8일 기자들에게 발표한 내용 가운데 “남조선의 질서를 교란하고 치안을 파괴하여 북조선과 같이 소련에 예속시키려는 공산계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무차비한 폭동 만행”의 대표적 사례로 ‘제주도 폭동’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병옥의 강경한 ‘4·3’ 인식에 대해 《경향신문》은 ‘제주도의 인민항쟁 진상’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인식의 상이함을 드러내었다.³⁹⁾

이러한 각 신문의 인식과 보도 태도는 중도좌익 정당의 담화에도 반영되었다. 근민당은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 신진당은 “제주도 사건, 동족상잔의 참극”, 사민당은 “동족간 분쟁”이라고 하여 조속한 해결을 당국에 호소하였다.⁴⁰⁾ 특히 내륙지방의 제주 출신 출향 인사들은 하나 같이 제주의 비극적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서울의 제주회는 4·3을 “불행한 사태”라고 하며,⁴¹⁾ 각 애국 정당 단체를 망라한 ‘제주도사건 대책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였다.⁴²⁾ 광주제주회에서 “동족살상의 피비린내 나는 제주도 사건”,⁴³⁾ 부산제주회는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족상잔의 참극”,⁴⁴⁾ 재경 유학생 단체인 백록학우회는 “민족의 비극 제주사건”⁴⁵⁾이라고 하여, 해결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1948년 6월경부터 제주를 왕래한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4·3을 불행한 사건으로 인식하며,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주도 사건 재판 관계자로 서울로부터 내도한 모변호사는 사건 해결책으로 “외지에서 들어간 사설단체를 일체 해산시키고 제주도 출신자로 신망 있는 자를 치정책임 부서에 등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당국은 도민의 신망을

38)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30일자.

39) 《경향신문》 1948년 6월 9일자.

40)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8일자.

41) 《조선일보》 1948년 6월 22일자.

42) 《한성일보》 1948년 7월 3일자.

43) 《조선일보》 1948년 7월 2일자.

44) 《한성일보》 1948년 7월 9일자.

45) 《서울신문》 1948년 7월 16일자.

회복하여야 폭도들에게 준 정치적 구실의 근인을 없앨 수 있다”고 하였다.⁴⁶⁾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판검사 일행 중 박근영 검찰관은 “사건 원인은 경찰이 민심과 유리된 것이다. 사설단체를 경찰력으로 이용한데 대하여 사설단체에 대한 비난이 높아가고 있다”라고 단언하였다.⁴⁷⁾ 범조인들은 4·3에 대해 “이번 사건, 사건 원인, 사건 해결” 등이라고 표현해, 범조계가 4·3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⁴⁸⁾ 제주도 파견 검찰관들의 현지 보고를 청취한 이인 검찰총장은 4·3에 대해 “제주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한 것은 시정방침에 신축성이 없었다는 것과 관공리가 부패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의 계열에서 바늘로 이를 터뜨린 것이 제주도 사태의 진상이라 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⁴⁹⁾

4·3을 ‘제주4·3사건’이라고 공식 명명한 사례로는 범조계 관련 기사에서 처음 확인된다. 6월 17일자 4·3과 관련한 판검사 동향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 처음으로 ‘제주4·3 소요사건·4·3사건’이란 명칭이 보인다.⁵⁰⁾ 이후 7월 20일자 《서울신문》에는 “현지를 시찰한 판·검사 및 변호사 제씨가 이번 4·3사건의 원인으로 관공리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거니와”라고 하여, 일반적인 4·3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후 1948년 10월부터 1949년 1월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치러진 4·3 관련 재판 보도기사들은 한결같이 ‘제주 4·3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⁵¹⁾

46)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1일자.

47) 《경향신문》; 《서울신문》 1948년 6월 15일자.

48) 《동아일보》 1948년 6월 15일자. 기사에는 박근영 검찰관이 ‘폭도’·‘폭동’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사설단체를 경찰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상반되게 적고 있다. 여러 범조인의 4·3 인식을 살펴보면, 《동아일보》의 이런 기사가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다.

49) 《서울신문》 1948년 6월 16일자.

50) 《대동신문》;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7일자.

51) 《서울신문》 1948년 10월 7일자; 《조선일보》 1948년 10월 12일자; 《국제신문》 1948년 11월 30일자; 《조선중앙일보》 1948년 12월 12일자; 《국제신문》 1948년 12월 14일자; 《조선중앙일보》 1948년 12월 24일자; 《국제신문》 1948년 12월 26일자; 《한성신문》 1949년 1월 3일자.

2) ‘반란’으로 專一化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제주도는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고, 재산 무장대를 중심으로 한 저항세력은 신생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미군정기에 발발한 4·3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따라 신생 국가를 거부하는 ‘叛亂’으로 남한에서 인식되어 갔다. 더욱이 지하선거 및 백지날인을 통해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활동을 주도한 김달삼 등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가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에게 4·3과 제주도는 반드시 ‘肅清’해야 할 배타적 제거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1948년 10월 10일부로 대통령으로부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 권한을 인가받은 제주 진압부대(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명칭은 ‘숙청부대’였고 그들의 작전 내용은 ‘숙청 행동’이었다.⁵²⁾

‘숙청 행동’의 시작은 10월 17일 송요찬 제9연대장이 제주 해안에서 5km 이상 지역에 통행금지를 명령하면서 이를 어길 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에 처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 발표였다. 신생 정부는 10월 18일 제주 해안을 봉쇄했고, 제주도 진압을 위해 여수 주둔 제14연대를 제주에 파견 명령을 내렸다. 이를 거부한 여수 주둔 14연대 반란사건이 일어나자 대한민국은 제주를 포함한 두 곳의 반란지구를 설정해 총력 진압에 나섰다.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주도지구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함위지경으로 정한다”고 제주도 토벌의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⁵³⁾ 이제 4·3은 ‘해결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진압해야 할 반란’으로 인식되었다.⁵⁴⁾ 모든 신문에서 4·3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논조의 기사들은 사라졌다. 언론에 대한 탄압과 검열이 가해졌던 것도

52) 「육군총사령부 일반명령 제2호」, 1948년 10월 27일자.

53) 《관보》 제14호, 1948년 11월 17일자.

54) 「현지질서 회복 / 제주작전서도 포로 200여 / 반란사건 속보 국방부서 발표」, 《조선일보》 1948년 11월 3일자; 「맹렬히 토벌 중 / 제주도내 반도 소탕은 계속」, 《서울신문》 1948년 12월 5일자; 「안도하라! 국군은 엄존 / 반란사건의 전모 /李 국방장관 국회서 설명」, 《국제신문》 1948년 12월 9일자. 이들 기사는 한결같이 4·3을 여순반란사건과 같이 ‘반란’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시기와 일치한다.⁵⁵⁾

이미 미군정기에도 《조선일보》는 4·3을 ‘반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 사설을 쓴 바 있었다.⁵⁶⁾ 《조선일보》는 이 논조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9월 9일자 사설을 통해 제주도 사건을 재검토하면서까지, “제주도 사건은 4월 초순 발생 이래 將近 반년에 일시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듯하더니 최근 다시 경찰에서 토벌대를 증파한다는 사실로 보아 다시 사태가 험악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거의 전 도민이 害에 대한 불만불평의 증오감정을 본 사건에서 직접 폭발시키고 있는 점에서 돌연히 일종의 반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⁵⁷⁾ 다시금 반란의 인식을 상기시켰다. ‘전도민적인 반란’은 ‘전 도민에 대한 배제와 숙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진전될 수 있다고 보인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 사설이 게재된 9월 9일은 북한 정권의 수립일이므로, 4·3과 북한과의 연계를 은연중에 시사한 글로도 읽힌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제주도 일원을 초도화시킨 대한민국 군과 관련된 신문 기사는 반도 및 폭도와의 전투에서 승전했다는 공적사항만 보도되었다. 수많은 주민들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公的인 인식 대상에서 감추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월 21일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5) 1948년 10월경 경향신문 제주지사장인 현인하가, 뒤이어 서울신문 제주지사장인 이상희가 군에 끌려가 총살되었다. 1948년 11월부터는 사전 검열을 실시하여 언론을 완전히 통제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91쪽.

56) “제주도민의 혼인이 대부분 도민 간에 많다는 특수사정으로 보아 도민 중에는 폭도 측 청년 중에 어느 누구나 대부분이 친척이 아니면 소위 ‘사돈의 8촌’ 짝이라도 戚分을 가진 사람이 폭도 측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孤島의 특수한 전통생활에서 가져온 自道民 우선 혹은 비호의 소극적 배타심도 도와서 도민들이 흔히 폭도 측 청년에 대하여 동정적 경향에 있었을 것을 심분 짐작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이미 2개월에 다수한 인원이 어떻게 산중 농성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그들이 약탈에 능했다 하더라도 다수한 주민의 실향 있는 동정적 무엇이 없이는 容易히 가능치 못했을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의 동정적 감정이나 직접 간접의 응원적 태도를 가산한다면 제주도의 사태는 일종의 반란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조선일보》 1948년 6월 5일자).

57) 《조선일보》 1948년 9월 9일자.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회화 것이며 지방 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전 각료 및 공무원들에게 유시 하여, 58) ‘반란의 섬’ 제주도의 주민 학살을 정당화하였다.

수많은 죽음의 시간이 일단 정지한 1949년 봄이 되자, 언론은 “제주도 반란이 일어난 지 어언 11개월이 되었다. 반도 섬멸은 멀지 않았다”는 이범석 국무총리의 제주시찰 談을 게재하였다. 59) 그리고 언론은 “반란으로 연기했던” 국가의 관심사인 두 국회의원의 재선거로 눈을 돌렸다. 60) 반란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부모 혹은 남편을 잃고 작은 초가나마 타서 없어진 채 거리에서 생명의 위협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는 “국군과 경찰의 적절한 작전으로 (제주도민을 위협한) 반란군 섬멸은 거의 끝났다”고 자부하였다. 61)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4월 9일 “파괴분자들에게 항거하여 충성을 굳게 지켜 온 양민들에게 몸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공산주의자의 만행을 견디어온 그들의 고충에 대하여 심심한 동정을 표하기” 위하여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62) 대통령은 제주읍 근교에 있는 포로로 된 소위 ‘산사람들’ 2,500명이 수용되어 있는 전재민 수용소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한편 도민을 격려하였다. 63) 제주로부터 귀경한 대통령은 “반란분자를 다 숙청하기로 결심인바 제주도에서 부터 먼저 정돈하였다”고 정리하였다. 64)

1949년 5월 10일 제주섬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어, 지난 해 보이콧되었던 두 개 선거구에서 두 사람의 선량을 선출하였다. 이제 제주도는 ‘반역의 땅’이란 붉은 딱지를 붙인 채 1년 늦게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었다.

58)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21일.

59) 《자유신문》 1949년 3월 17일자.

60) 《자유신문》 1949년 3월 20일자.

61) 《자유신문》 1949년 4월 10일자.

62) 《자유신문》; 《경향신문》; 《국도신문》; 《조선중앙일보》 1949년 4월 10일자.

63) 《조선중앙일보》 1949년 4월 12일자.

64) 《조선중앙일보》 1949년 4월 13일자.

3. 4·3 이후 인식과 서술

1) 다시 ‘사건’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구역을 전면 해제하면서 장기간의 4·3은 마감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권위주의적 반공국가체제 하에서 제주도민들은 공산주의를 증오하는 의식과 함께 국가의 물리력에 대한 공포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의 모든 좌경세력이 궤멸되어 안정된 관료국가체제가 자리 잡도록 하였으며, 거기다가 우익보수주의자들이 표방했던 반공 이념에 확고한 정통성을 부여함으로써 반공의 보루로서 제1공화국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쟁 이전의 통일정부 수립의 여망과 민족주의 이념으로 연계되었던 남한사회 정치사회세력은 자취를 감추었다. 국가체제의 과도한 성장만이 존재할 뿐 시민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 시기 제주도민들은 4·3의 피해의식을 간직한 채 이러한 국가체제에 서서히 순응하여 갔다. 1952년 있었던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도민이 이승만에게 83%의 지지를 보냈던 것은 이를 입증한다.

1960년 4·19혁명은 한국전쟁과 이승만 반공독재체제하에서 도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가졌던 공포감에서 벗어나 누적된 불만을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19가 일어나자 10여 년간 입을 굳게 다물었던 4·3 피해유족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4·3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움직임은 민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 5월, 고순화·고시흥·박경구·양기섭·이문교·채만화·황대정 등 제주대학생 7인이 ‘4·3사건진상 규명동지회’를 조직하여 4·3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였다.⁶⁵⁾ 이들은 《제주신보》 광고란에 호소문을 게재하여, “4·3사건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하여 사건 당시 양민을 학살한 주동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와 제주도민들에게

65) 《제주신보》 1960년 5월 25일자.

호소하였다.⁶⁶⁾ 이어서 5월 27일에는 제주도 남제주군 모슬포에서 유기족 등 주민 60여 명이 집회를 열어 1949년의 ‘특공대 참살 사건’과 1950년 ‘예비검숙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호소하였다.⁶⁷⁾

1960년 5월 23일 국회에서 거창·함양 등지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조사단이 구성되자, 제주 출신 국회의원 김두진이 제주4·3사건의 진상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발의하였다.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경남반(경남 지역 조사반, 최천 위원장, 박상길·조일재 위원)의 조사 지역을 확대하여 6월 6일 하루 동안 4·3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⁶⁸⁾ 5월 30일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당시 제주신보사는 6월 2일자 社告를 내고 ‘4·3사건 및 6·25당시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하여, 국회조사단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⁶⁹⁾ 한편 제주시의회는 6월 3일 ‘4·3사건 등 양민학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제주시내를 7개 구역으로 나눠 조사에 나섰다.⁷⁰⁾ 또한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는 도보로 일주도로변 50개 마을을 일주하여 조사하였다.⁷¹⁾ 국회의 4·3에 대한 규정은 ‘양민학살 사건’이었고, 제주도내 언론과 시의회 역시 이러한 공적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6월 6일 제주도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조사단의 증언 청취 자리에서 10년 동안 한을 품어온 희생자 유족들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 학살 당시의 불법성과 잔인성을 폭로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⁷²⁾ 당시 증인으로 나선 고순화·신두방은 “4·3사건 당시, 과거 4·3사건 때에, 4·3사건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직”이라고 증언하여 제주도민 사이에 일반적으로 공유되던 4·3 ‘사건’의 인식을 드러내 보였다. 이에 대해 4·3 때 경찰청장으로 재임했던 최천 위원장 또한 “4·3사건이라면 10년이 넘었습니다. 대거 폭동이

66) 《제주신보》 1960년 5월 26일자.

67) 《제주신보》 1960년 5월 31일자.

68) 《제주신보》 1960년 6월 1일자.

69) 《제주신보》 1960년 6월 2일자.

70) 《제주신보》 1960년 6월 3·4일자.

71) 《제주신보》 1960년 6월 7일자.

72) 『양민학살사건 국회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1960년 6월 6일); 《제주신보》 1960년 6월 7일자.

일어날 것이다 해서 그때 제가 작전명령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여 폭동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건’으로 호칭하였다. 한편 《제주신보》(1960년 9월 14일자)에는 ‘의외로 큰 4·3, 6·25의 상처’라는 제목에 보이듯이, ‘4·3’을 이니셜로만 쓴 사례도 처음으로 확인된다. ‘4·3’ 자체가 전체 사건을 통칭하는 명칭이 된 것이다.

4·19 공간 시기에 4·3의 공적 인식은 ‘폭동’과 ‘반란’에서 ‘수많은 양민이 학살된 사건’으로 변화했다. 1948년 6~7월 당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복원된 것이지만, 이때의 ‘사건’은 1948년 11월 이후 전개된 집단학살의 실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현재적 과제 인식이 결합된 것이었다.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와 제주도 민전 임원을 지낸 고창무는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 4·19 직후 4·3의 인식이 ‘항쟁’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3·1사건에 시달리고 시달려 참으려 해도 더 참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른 도민은 최후의 수단으로 1948년 4월 3일을 기하여 一揆蜂起 도를 봉쇄하고 경찰에 무장반항의 태세를 취하니 이것이 바로 4·3사건인 것이다. 산봉우리에 있는 돌맹이는 극소의 외부적 힘의 작용에 의하여 구르기 시작하면 어떠한 큰 힘으로도 정지시키지 못하고 평탄한 지점까지 轉落하고야 마는 것과 같이 건조할 대로 건조한 들판에는 불씨만 있으면 필사의 소화작업도 보람 없이 온 들판이 灰燼하고야 마는 것과 같이 4·3사건은 폭발하고야말 정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여,⁷³⁾ 잠재해 있던 ‘항쟁’의 4·3 인식을 공적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했다.

2) ‘폭동’의 지배

1960년 열린 4·3 해결의 물꼬는 다음해 5·16 군사쿠데타로 다시 막혀버렸다. 이로부터 20여 년간 군부독재의 억압체제 속에서 4·3 논의는 금기시되었다. 반공법·국가보안법과 연좌제의 억압기제는 4·3에 대한 발설조차 못하게 하였다. 도민의 입을 통한 4·3 증언은 기대할 수 없었고, 4·3 인식과 담론은 국가권력

73) 《조선일보》 1960년 7월 16일자.

이 독점하였다.

1967년 국방부에서 펴낸 『한국전쟁사』는 4·3을 ‘제주도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주도 출신 공산주의 신봉자들에 의하여 순박하였던 도민들을 기만하고 赤貧 대중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미명하에 그 실천 방안으로 도민 전체를 조직과 혼란으로써 남한의 민주적 발전 토대를 전복하려는 남로당의 전략전술에 의하여 기도된 것”이라고 하였다.⁷⁴⁾ 즉 4·3을 제주도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군·경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

4·3을 폭동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은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 서술에 반영되면서 지배적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4·3이 마무리된 해로부터 시작된 제1차 교육과정 시기(1954~1963)와 제2차 교육과정 시기(1963~1974)까지 고등학교 사회 및 국사 교과서에 4·3은 서술되지 않았다. 1972년 10월 유신을 거친 뒤 1974년부터 시작된 제3차 교육과정에서 유신정부는 ‘국적 있는 교육’을 표방하며 국사를 사회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 교과로 만들었다. 그리고 국사 교육을 강화시킴과 더불어 국가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인정제에서 국정제로 전환하였다. 1976년 문교부에서 발행한 국정교과서 『국사』에는 4·3은 북한이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일으킨 폭동으로 기술되었다. 유신정부는 국사교과서를 국정에서 1종으로 전환하고 발행의 책임을 국사편찬위원회로 넘겨서 1979년에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4·3은 이전과 똑같이 서술되었다. 전두환 정권기인 1982년에 편찬된 국사 교과서는 4·3을 ‘폭동’으로 전제한 뒤 ‘공산무장폭도가 일으킨 남한 교란작전’이라고 서술하였다.

군사정권하에서 4·3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동으로 규정한 획일화된 공적 인식만이 통용되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공론화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억압되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또한 4·3을 거론하고 발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967, 451쪽.

시기별 교과서	서술 내용
1차 교육과정	언급 없음
2차 교육과정	언급 없음
3차 교육과정 - 박정희 정권 - 1976년 발행 - 문교부발행 - 국정교과서	“북한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에서의 폭동과, 여수·순천에서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3차 교육과정 - 박정희 정권 - 1979년 발행 - 국사편찬위 - 1종교과서	“북한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여수·순천에서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4차 교육과정 - 전두환 정권 - 1982년 발행 - 국사편찬위 - 1종교과서	“북한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 폭동사건과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일으켰다. 제주도 폭동사건은, 북한 공산당의 사주 아래 제주도에서 공산무장폭도가 봉기하여, 국정을 위협하고 질서를 무너뜨렸던 남한 교란작전 중의 하나였다. 공산당들은 도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후 우리나라는 군경의 활약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여수·순천 반란사건은 제주도 폭동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3) ‘항쟁’의 대두와 정부 인식과의 대립

4·3을 민중항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대두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학생운동권 사이에 몰래 읽힌 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및 『血의 역사』, 메릴의 학위논문 등은 장막으로 가려졌던 4·3의 실상을 서서히 드러내게 하였다. 당시 이 글들을 접했던 젊은이들, 특히 제주 출신 대학생들은 미군정과 대한민국 신생정부의 탄압에 대한 제주민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들 운동의 중요한 자산으로 받아들였다.

1987년 4월 3일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4·3 발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위령제를 학내에서 개최하였다.⁷⁵⁾ 그리고 당일 총학생회·여학생회·써클연합회·인문대학

생화·사회과학대학생회 공동 명의로 4·3 관련 대자보를 학내에 부착하였다. 당시 작성된 대자보에는 4·3의 성격을 ‘민중항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시 ‘폭동’만 허용되던 공적 인식에 정면으로 대항하였다. 대한민국 내에서 민중항쟁 인식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1948년 11월부터 민간인 집단학살이 벌어진 이래 처음이었다. 이 4·3 대자보로 인해 4월 15일 여학생회장과 사회과학대 홍보부장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학생들은 이후 중간고사 거부를 통해 ‘연행학생들의 석방투쟁’과 ‘부당징계 철회투쟁’, ‘어용총장 퇴진투쟁’, ‘민주제 개헌 쟁취투쟁’을 이슈로 내걸고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다.⁷⁵⁾ 이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4·3은 자연스럽게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진영에서 항쟁으로 인식되어갔다.

1980년대 후반의 격렬한 민주화운동의 분위기는 4·3 연구에도 곧바로 반영되었다. 1988년 양한권·박명림 등의 소장학자들이 민중항쟁론의 입장에서 4·3의 배경, 전개과정을 다룬 석사논문을 발표하였다. 두 논문에 의해서 촉발된 민중항쟁론에 입각한 연구는 이후 고창훈·서중석·김창후·김중민·양정심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 연구는 전 시기까지의 폭동 인식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4·3을 제주민의 시각에서 보고자하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 왔고, 4·3의 성격을 방어적 평화투쟁으로 인식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중항쟁론에 입각한 연구 결과는 4·3 발발 50주년인 1998년 『제주4·3연구』로 일단 정리되었다.

1989년 제주 지역의 재야운동단체들은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1회 ‘제주항쟁추모제’를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 직후인 5월 10일 ‘제주4·3연구소’가 발족됐다. 제주4·3연구소는 창립 이후 증언집 『이제사 말할수다 1, 2』(1989, 1990), 증언채록집 《4·3장정》 6권, 무크지 《제주항쟁》을 발간하여 사실 증언의 축적과 학술적 논의의 바탕을 마련했다. 4·3연구소를 비롯한 재야단체들은 4·3을 항쟁으로 인식했고, 이를 공적 인식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장을 찾아간 연구자들은 항쟁으로서 4·3보다 학살 사태로서 4·3을 주로 듣게 되었다. 연구자나 재야단체의 인식은 ‘항쟁’이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는

75) 《제대신문》 1987년 4월 13일자.

76) 《제대신문》 1987년 5월 13일자.

‘사건’으로서 4·3이었다. 아직도 냉전체제의 공적 인식이 증인들을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주요 학살 사례와 관련된 증언은 대부분 이때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고조된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 확산된 4·3의 항쟁 인식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인식과 대립하며 갈등을 빚었다. ‘한라산’을 쓴 시인 이산하는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문공부는 『제주민중항쟁』 등 4·3 관련 서적을 포함한 7종을 좌익서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붉은 도서’가 범람한다는 논조를 펼쳤다.⁷⁷⁾ 결국 1990년 7월 13일 치안본부 대공3부가 『제주민중항쟁』 출간과 관련해 김명식 등 관련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국가 공공기관은 여전히 폭동의 인식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1988년 국방부에서 펴낸 『對非正規戰史』에는 “4·3폭동사건은 해방 후 사회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소수의 공산분자들이 순박하고 가난한 섬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제주도를 공산화하려고 획책한 사건”으로 서술되었다.⁷⁸⁾ 1994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간한 『제주경찰사』는 기존의 폭동 인식을 고수하였다. 199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제주 4·3사건을 “1948년 4월 3일을 기해서 제주도 전역에 걸쳐 남조선노동당 계열의 좌익분자들이 일으킨 대폭동”이라고 서술하였다.

대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사 교과서의 경우 또한 다를 바 없었다. 1990년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4·3사건은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 서술되었다. 이전 교과서에 비교할 때 북한의 사주 부분이 삭제된 정도에 불과하다. 4·3 부분을 집필한 연구자는 “현대사 관련 책자 몇 권을 참조해서 썼으며, 현대사 부분에 대해선 공부를 많이 못해서 다른 분들의 글을 참조하는 정도였다”고 실토하였다.⁷⁹⁾

1994년 3월에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근현대사의 역사 용어를 시대

77) 《조선일보》 1988년 6월 23일자.

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對非正規戰史』, 1988, 26-30쪽.

79) 제민일보 4·3취재반, 『국사교과서 속의 ‘4·3 왜곡’』, 『4·3은 말한다』 2, 409-413쪽.

흐름에 맞게 다시 정의해 수록하려는 개편 작업과 관련하여 여론 수렴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국사교육 내용·전개준거안 연구위원회’(위원장 이준희 서울 시립대 교수)가 개최한 세미나 자리에서 제시된 교과서 개편 시안 가운데 지금 까지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돼온 제주4·3폭동을 ‘항쟁’으로 정의 하자는 주장이 들어 있었다. 연구위원회는 과거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좌우익 운동을 모두 민족운동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었다. 현대사 부분의 개편시안을 발표한 전공 교수에 대해 보수학자들의 격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동아일보》는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론을 주도하였다.⁸⁰⁾ 결국 교육부는 언론과 학계의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항쟁’ 의견은 私見임을 전제하여 추후에 신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새로이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결국 교육부는 1994년 8월 31일, 1996년 부터 바뀔 중·고등학교 새 국가교과서에서도 현행대로 ‘제주4·3사건’으로 기술 하는 것으로 최종 시안을 발표하였다.⁸¹⁾ 1996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에서 4·3은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규정되었고, 다만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새로이 추가되는 정도에 머물렀 다. 국사 교과서 서술에서 보듯이, 1990년대 후반까지도 한국 정부의 4·3 인식은 폭동을 벗어나지 않았다.

시기별 교과서	서술 내용
5차 교육과정 - 노태우 정권 - 1990년 발행 - 국사편찬위 - 1종교과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그들은 제주도4·3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을 일으켰다. 제주도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 그들은 한라산 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군경의 진압작전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6차 교육과정 - 김영삼 정권 - 1996년 발행 - 국사편찬위 - 1종교과서	“공산주의자들은 5·10총선거를 전후해서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남한 각지에서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제주도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 되었으며,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

80) 《동아일보》 1994년 3월 20·21일자.

81) 《한겨레신문》 1994년 9월 1일자.

4) ‘사건’의 제도화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4·3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르면, 4·3의 진상규명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실태를 밝히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4·3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4·3위원회는 2003년 10월 15일 4·3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확정했다.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4·3사건’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보고서에서 사용한 ‘사건’이라 함은 ‘단순히 일어난 사소한 우발적인 일 또는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 만한 일’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과거 있었던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3에 대한 正名 부여는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역사적 성격 규정을 유보한 채 ‘제주4·3사건’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직 역사적 연구의 여백을 남겨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거치면서 4·3은 ‘사건’으로 공적 인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도 폭동으로 인식하는 세력은 강하게 대항하였다.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후에도 2004년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18만 5,000명이 서명하여 보고서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하였다. 국방부는 『6·25전쟁사』를 발간하면서 또 다시 폭동으로 서술하였다가 제주도내 4·3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내용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4·3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현재 해결 중에 있는 ‘사건’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런 4·3의 제도화는 2002년 시작된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정부 수립을 전후 한 시기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여 폭동의 기술이 사라졌다. 최근 수정된 2007년판 국사 교과서에는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등이 일어났다. 제주도 4·3사건은 제주도에서 벌어진 단독 선거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서술되었다. 제도화된 4·3이 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사건으로서 인식이 공인을 받게 되었다. 또한 새로이 개설된 한국근·현대사 과목의 6종 검인정 교과서에도 4·3 인식의 전환이 반영된 서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4·3 서술 내용>(가나다순)

교과서 종류	서술 내용
금성출판사	<p><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 가장 격렬한 반대 투쟁이 일어난 곳은 제주도였다. 1948년 4월 3일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은 무장 봉기하여, 도내의 관공서와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제주도 4·3사건). 이들은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하여 경찰 및 군인들과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두 곳에서는 총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들 지역의 선거는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었다. 미군정과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청년 단체들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함께 희생되었다.</p>

<p>대한교과서</p>	<p><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광복 후에 모든 국민은 통일 국가 수립을 바랐으나, 냉전 체제가 굳어지면 서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과 군 경이 충돌하는 유혈 사태가 남한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이었다.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행진을 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 하면서 총파업을 벌이며 항의하였다. 그런데 군정 당국은 민심을 수습하기 보다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수천 명의 일반 주민들까지 투옥함으로써 주민들의 반감을 샀다. 이 사건은 1948년에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장 봉기를 주도한 것은 수백 명밖에 안 되는 좌익 세력이었다. 그런데 국군과 경찰은 이들은 진압하면서 산간 마을을 모두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1954년에 끝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p>
<p>두산</p>	<p>제주도 4·3사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전후하여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3일에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민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미군 철수, 단독 선거 절대 반대, 경찰과 테러 집단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제주도 4·3사건의 배경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좌익 세력의 활동,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가 벌어졌을 때 군정 경찰의 발포로 희생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에 항의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미군정 당국이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추가로 파견함으로써 제주도민과 군정 경찰 및 서북 청년단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었다. 미군정은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 경찰, 청년단을 증파하였다. 여기에 맞선 주민들은 한라산으로 들어가 인민 유격대를 조직하고 대항하였다. 이에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5·10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토벌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빚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도 많이 희생되었다. <주석> 제주도 4·3사건의 피해 1949년 6월까지 계속된 진압 과정에서 약 2만~3만 명의 제주도 도민들이 희생되었다고 한다.</p>
<p>법문사</p>	<p>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의 국내 정세 광복 이후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족 통일 국가의 수립이 남북 분단으로 좌절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확실시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좌익 세력은 단독 정부의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곳곳에서 벌였는데, 1948년 2월 7일에는 서울에서 총파업을 단행하고 단독 정부 수립과 단독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주도하였다.</p>

	<p>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의 좌익 세력들이 미군 철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도내의 경찰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하였다 (제주도 4·3사건). 미 군정청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였는데,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었다. 이에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5·10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p>
<p>중앙교육 진흥연구소</p>	<p>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좌익 세력은 전국적으로 파업, 시위, 소요, 폭동 등을 통하여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을 벌였다. 1948년 4월에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총선거를 방해하고자 소요 사건을 일으켰다 (제주도 4·3사건). 이 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자로 구성된 유격대와 군·경찰·극우 청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 사이에서 많은 양민이 희생당하기도 하였다.</p>
<p>천재교육</p>	<p>국가 재건을 위한 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모든 행정적 권한을 이양 받은 후 사회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제주도와 여수·순천 지역에서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자 정부는 먼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소요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였다.</p>

4. 맺음말

1948년 4월 3일 당일 일어난 사건은 폭동, 무장봉기 등으로 신문에 보도되었다. 신문 매체가 갖는 공공성으로 인해 독자 대중들에게 4·3은 뚜렷이 공적 인식으로 각인되었다. 이후 대중들은 이 사건 전반을 ‘4·3’이 들어간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단, ‘4·3’의 뒤에 붙는 명칭은 공적 인식의 변화를 사회가 수용하는 정도와 개인·공동체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불렸다.

1948년 4월 3일 재산 무장대의 습격에 대한 미군정 당국의 공식적 반응은 “폭도들의 총선거 반대 폭동”으로서 즉각 소탕한다는 것이었다. 4월 중순 이후 무장대와 미군정이 심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언론매체의 인식도 상반되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우익계 신문들은 ‘폭동’의 인식 기조를 유지한 반면, 《독립신보》·《우리신문》·《조선중앙일보》 등 좌익계 신문들은 ‘소요사건’·‘무장봉기’·‘제주도의 항쟁’·‘제주도 인민봉기’ 등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독립신보》는 “제주도민들이 외군 철퇴, 단선단정 반대 등을 부르

짓은 끝에 민경 간의 무력충돌로 발전한 제주도 소요사건”이라고 정리하였다.

1948년 6~7월에 긴박한 제주도 상황이 느슨해지자, 신문과 잡지 지면에는 4·3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려는 기사들이 늘어났다. 당시 제주 현지를 다녀간 기자들은 미군정 당국, 경찰의 입장과는 매우 다르게 4·3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언론을 통해 ‘4·3사건’이란 용어가 일반적인 사건명으로 인식되어 갔다. 또한 이 시기 4·3 관련 재판을 치렀던 법조인들은 4·3을 ‘불행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4·3은 ‘해결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진압해야 할 반란’으로 인식되었다.

전쟁과 이승만 집권을 거치는 과정에서 ‘폭동·반란’으로 억압되었던 4·3 인식은 1960년 4·19 혁명을 거치며 다시 ‘사건’으로 환원되었다. 일부 ‘항쟁’의 인식을 공적으로 제기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5·16 쿠데타로 좌절되었다. 이후 반세기 동안 4·3은 국가 권력의 공적 인식만이 통용되는 시간이었고, 4·3의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역사적 인식과 기억을 국가가 주도하여 통제하는 기재로서 활용되는 국사 교과서에는 4·3은 “북한 공산당의 사주 아래 제주도에서 일어난 공산무장폭동”으로 서술되었다.

4·3에 대한 재인식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비롯되었다. ‘항쟁’ 인식이 학생층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고, 활발한 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4·3을 아직도 ‘폭동’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과 여러 지점에서 대립하였다. 국사 교과서 및 역사교육자료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도 4·3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이었다. 1994년 현대사 전문학자를 중심으로 4·3을 ‘항쟁’으로 교과서에 서술해야 한다는 교과서 개편시안을 제시했지만,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압력 속에 백지화되었다.

4·3의 공적 인식이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은 2000년 4·3특별법의 제정과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의 확정,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일련의 제도적 해결과정의 결과였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과정에서 재연된 끊임없는 이념 논쟁, 2000년 『제주경찰사』 왜곡 사태, 2004년 국방부 『6·25 전쟁사』의 왜곡 등 4·3의 공적 인식을 둘러싼 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4·3의 공적 인식은 당시 상황으로부터 4·19, 6월 항쟁, 특별법 제정과 진상보고서 확정을 거치며 변천하여 왔지만, 아직도 ‘사건’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공적 인식·서술의 변천 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사건’의 명칭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진전된 공적 인식의 획득은 ‘사건’에 머물러 있는 4·3의 실상과 성격을 더욱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5월 17일, 심사완료일: 6월 9일]

주제어: 4·3사건, 공적 인식, 사건 사태, 폭동, 반란, 소요, 봉기, 항쟁, 양민학살

<참고문헌>

- 고성만,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4·3과 역사》 5, 2005.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對非正規戰史』, 1988.
- _____, 『한국전쟁사』 제1권 해방과 건군, 1967.
- 권귀숙, 『기억의 정치-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문학과지성사, 2006.
-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민주주의와 인권》 3집 2호, 2003.
- 김종민, 『4·3 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무라카미 나오코, 『프란케 문고 내의 제일조선인 발행 신문에 나타난 제주4·3 인식』, 《4·3과 역사》 5, 2005.
- 박찬식, 『4·3연구의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2, 실천문화사, 1999.
- _____, 『북한의 제주4·3사건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0, 2004.
-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16, 1995.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forcible mobilization under the oppressive situ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pro-american and anti-communistic government in Southern Korea.

Keywords: USIS, Propaganda, USAMIG, UNTCOK, the National Election on May 10th, 1948.

The Public Recognition and Description on Jeju 4·3

Park, Chan-sik

The incident that happen on April 3, 1948 was reported in term of riot, armed uprising etc. Populaces called this event whole as name of ‘4·3’. US Armed Forces recognized attack of commando group as “Mobs’ general election reverse riot” April 3. Cognition of newspaper appeared to differ at process that commando group and US Armed Forces are opposed extremely. Newspaper account to see ‘4·3’ in neutral standpoint increased from June, 1948 onward. At that time, reporters who came in Chejudo were recognizing 4·3 very differently with US Armed Forces and the police. Now, ‘4.3 incident’ term was appraised in general event name. But,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d 4·3 to rebellion after foundation of a country on August 15, 1948.

4·3 cognitions returned as ‘incident’ again since 4·19 revolutions in 1960. But, only government’s cognition of 4·3 communicated for 50 years since 5·16, and discussion was prohibited fundamentally. 4·3 was described as “Armed revolt of Communists which get up in Chejudo by North Korea Communists’ instigation” to a history text book.

Recognizing about 4·3 was star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 in June, 1987. ‘Uprising’ cognition brought in student floor and civic society. But, civic society was opposed extremely with government’s cognition as ‘riot’. After 4·3 reports

are made out in 2003, public cognition of 4·3 returned to normalcy location. Forward subject is that truth and personality of 4·3 more definitely.

Keywords: 4·3 incident, public recognition, incident, situation, riot, rebellion, disturbance, uprising, resistance, massacre of the innocent people